



주간 통일정세

2012-4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평양 집결(9/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 참석할 대의원들이 평양에 모여 회의 참가준비를 마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24일 인민무력부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고 이날 전함.

- **北, 12년제 의무교육 공표...경제개혁 발표 없어(종합)(9/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의가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지만 기대를 모았던 경제개혁 관련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이 통신은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6차 회의의 관련 보도에서 안건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와 '조직문제'라고 밝혔지만 경제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음.
 - 또한, "회의에서는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힘.

- **김정일 아랍계 수양딸, 北 투자설명회 등장(9/26,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양딸로 알려진 아랍계 여성이 2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한 경제특구 투자설명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함.
 - 북한 당국은 20대의 나이로 추정되는 그녀를 귀빈 대우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여성은 자신을 김 위원장의 양녀라고 소개하면서 북한 어린이의 교육과 건강을 위한 기금인 진달래아동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 9/25,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 9.25 김정은 黨 제1비서 등 참석(대의원 : 687명 中 597명 참석) 下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채택 등 진행(9.25, 중통·중방·평방)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발표】
- 혁명발전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 하고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하며 대상은 5살부터 17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며, △1년제 학교전교육과 5년제 소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 교육으로 함.
- △2013년~2014학년도부터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하며, △4년제 소학교를 5년제 소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은 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쳐 2014~2015학년도부터 시작하여 2~3년안에 마침.
- 9/25, 김정은 黨 제1비서, 9.25 함옥란 100세 노인에게 '생일상' 전달
- 9/29, 김정은 黨 제1비서, 남포혁명학원 등 남포시 각급 학원들에 '감 선물' (9.29, 중방)
- 김정은, 최고성지 조성에 이바지한 전자공업성 부원 등에게 '감사' 전달(9.29, 중방)
- 9/29,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대학습당에 많은 도서들과 자료들 전달(9.29, 중통)
- 올해 정초부터 현재까지 보내준 도서는 36차에 걸쳐 총 2,300여종 1만8,800여부임.

■ 기타 (대내 정치)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법령 발표' 관련 '김정은의 후대관, 미래관을 깊이 새겨 교육중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후대중시, 교육중시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끝없이 빛내어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것'은 독려(9.27, 중통·노동신문·중방/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 최영림(내각총리), 평성합성가죽공장 및 평양항공역 2항공역사 건설정형 현지요해(9.29, 중통·중·평방)

나. 경제

- 北, 농업개혁 추진...곡물 시장거래 허용(종합)(9/24, 로이터 통신)
 - 북한이 농업 생산량 증산을 위해 농민들이 수확량의 최대 50%를 시장에



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농업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베이징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함.

- 이 소식통은 북한이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난 완화와 농산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농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경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농민은 지역에 따라 수확량의 30~50%를 가져가거나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北 환전상, 송금업무까지 취급(9/25,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환전상들이 암암리에 주민들의 송금 업무까지 취급하는 등 사실상의 금융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이 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 암시장에서 외화를 거래하는 환전상들이 수수료를 받고 송금을 대행해주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이 경우 송금자와 수령자는 각각 송금액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하며 북한의 화폐뿐 아니라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도 송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다. 사회·문화

● **北, 독자 개발 태블릿PC 공개(9/27, 신화통신)**

- 북한이 독자 개발한 태블릿PC가 공개됐다고 신화통신이 27일 전함.
- 이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에서 개막한 제8차 평양 가을 철 국제상품전람회에서 7인치 화면을 장착한 태블릿PC '아침'을 선보였다고 보도함.

● **北 류경호텔 2~3년 내 완공 전망(종합)(9/27, 연합뉴스)**

- 1980년대부터 짓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공사 중인 북한 평양의 류경호텔이 앞으로 2~3년 안에 완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Koryo Tours)는 호텔 공사 현장 소식통들이 "호텔 객실과 사무공간, 장기임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공되기까지는 2~3년이 더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26일 전함.

● **北 김정은 체제 첫 추석...차분한 하루(9/30,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 민족끼리'는 30일 "한가위는 연중 민속명절 중에서 가장 크게 쇠는 명절의 하나"라며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씨름, 그네타기,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고 소개함.



-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추석을 새 지도 체제의 정통성을 부각하는 데에도 활용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민속명절과 관련해 주신 가르치심과 취해주신 조치"로 추석이 민족명절로서 더욱 발전하게 됐다고 찬양했고, 우리 민족끼리는 "추석을 맞으며 인민들은 민속전통을 더 활짝 꽃피우시는 김정은 원수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있다"며 김제1위원장도 부각함.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제8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9.24~27) 개막식, 9.24 강석주(내각부총리)·리용남(무역상)·김성덕(평양시 인민위 부위원장)·오일훈(조선국제전람회 부사장/개막연설) 등 참가자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9.24, 중통·중방)
 - 중국, 네덜란드,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210여개 무역회사들과 단체들 참가
- 김일성종합대학과 유라시아-태평양대학연합의 공동학술토론회 개막식, 9.24 성자립(김일성대 총장 겸 고등교육상) 등 참가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9.24, 중통)
 - 주제 : 인간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물의학 및 생물공학의 발전
 - 토론회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9.24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9.24, 중통)

2. 대외관계

가. 일반

- 러, 北에 밀가루 4천t 추가 지원(9/24, 러시아의 소리 방송)
 - 러시아가 북한에 밀가루 4천t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24일 전함.
 - 이 방송은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북한에 밀가루 4천t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며 "비상사태부 관계자는 '대북 지원은 러시아 정부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이의 양해문에 따라 실현된다고 말했다'고 밝힘.
- 北中, 베이징서 경제특구 투자설명회 개최(9/26,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26일 베이징(北京) 시내 중심가의 베이징치아오(北京橋) 예술센터에서 황금평 · 위화도, 나진 경제특구 투자설명회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함.
 - 북한 측은 중국 주요 기업들에 보낸 초청장에서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에 주력하는 북한이 중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으며, 투자설명회에 북한의 조선흑색 금속수출입상사, 조선선박무역회사 등 국영기업 관계자 36명이 나와 투자대상 43개 프로젝트를 소개했음.

● **中 상무부 "기업 대북투자 적극 지원"(9/27, 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의 천젠(陳健) 부부장이 "실력 있고 뜻있고 성의있는 중국 내외 기업의 북한 황금평·위화도, 나진 경제특구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27일 상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천 부부장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의 북한 투자설명회에 참석, "양국이 이미 경제특구 두 곳에 공동개발관리 지도위원회를 구성했고 개발계획, 법률, 통관, 통신, 인적훈련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함.
- 또한, 그는 "두 경제특구가 외국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면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고 밝힘.

● **北 양대 경제특구서 中 위안화 공식 통용(9/27, 중국 신정보(新京報))**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북한 나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에서 양국 화폐가 공식 통용될 전망이다라고 중국 신정보(新京報)가 27일 보도함.
- 이날 이 통신에 따르면 북중은 26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이들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설명회에서 중국 위안화와 북한 화폐를 경제특구 내 결제 수단으로 함께 사용하고 양국 은행의 분점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 경제특구 투자자의 경영소득에 대한 역외송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인과 외국인 소유 차량은 별도의 비자 발급과 출입증명서 없이 규정된 통로를 거쳐 출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음.

● **스웨덴, 北 장애인 지원에 43만 달러 기부(9/28, 미국의소리(VOA))**

- 스웨덴이 북한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43만 달러(약 4억8천만 원)를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스웨덴은 지난 21일 국제구호단체 '헨디캡인터내셔널'과 이런 내용의 대북지원 계약을 맺었으며, 이 단체는 스웨덴이 기부한 자금으로 북한 만흥정형외과병원과 함흥재활센터에서 재활 치료에 나서고 북한의 특수학교 4곳에서 장애아의 교육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힘.

● **中, 백두산 北지역 관광 개발 참여(9/28, 중국 성시만보(城市晚報))**

- 북한과 중국이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長白山)의 북한 쪽 지역에 대한 관광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나섰다고 중국 창춘(長春)에서 발행되는 성시만보(城市晚報)가 28일 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북중은 지난 25일 '제1차 백두산 합작개발 관광프로젝트 상담회의'를 열고 쌍방간 합작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북중이 백두산의 북한 지역 관광프로젝트 건설을 공동 추진하기로 확정했고 평등과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합작의 심도와 범위를 꾸준히 재고해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 **北, 美의 미얀마 대북관계 단절 요구 비난(9/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8일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미국은 처음에는 미얀마에 우리와의 군사관계를 중단할 것을 강요하다가 이제는 우리를 '나쁜 친구'로 몰아붙이며 관계단절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비난함.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과 18일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각각 뉴욕과 워싱턴DC에서 만나 미얀마와 북한의 군사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를 고립 압살해 보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자체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힘.
- **올 1~8월 북중 교역 40억 달러...작년비 11% 증가(9/29, 미국의소리(VOA))**
 - 올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8월 말 현재 40억 달러가 넘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9일 전함.
 - VOA는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의 통계자료를 인용, 올 1~8월 북중 교역액은 40억2천123만2천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한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7억1천473만5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으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23억649만7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함.
- **北, 對中 곡물수입 의존도 낮아져(9/29, 연합뉴스)**
 - 올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이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북중 교역동향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쌀, 밀가루, 옥수수 등의 곡물은 18만1천26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6천535t에 비해 16.3% 감소함.
- **美단체, 내년 2월까지 北어린이에 영양쌀 지원(9/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어린이구호단체인 FMSC(Feed My Starving Children)가 내년 2월까지 매달 35만 개의 영양쌀을 북한 어린이에게 지원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함.



- 이 단체의 홀리 도네이토 대변인은 발육부진의 북한 어린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30가지 영양소가 든 영양 쌀 420만 끼분을 지원한다고 밝힘.

● **北 김정숙군-中 장백현 자매결연(9/29, 길림신문(吉林新聞))**

- 북중 접경인 북한 량강도 김정숙군과 중국 지린(吉林)성 장백(長白)조선족자치현이 자매우호결연을 했다고 중국 길림신문(吉林新聞)이 29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김정숙군 인민위원회 김승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친선대표단은 최근 장백현을 방문, 자매우호결연 조인식을 했음.
- 장백현 공산당위원회 추라이푸 서기는 조인식에서 "장백현은 김정숙군과 변경무역, 관광, 광산자원 개발, 노무 송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입화물의 종류를 늘리고 김정숙군의 풍부한 석영과 산나물, 한방약재 자원 등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함.

● **두만강 상류 북·중 국경, 철조망 완전봉쇄(9/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맞은 편 중국 지역에 최근 새로운 철조망이 설치돼 두만강 상류 북중 국경지역이 봉쇄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말을 인용해 29일 전함.
- 또 지난 4월에는 함경북도 무산군 건너편에 새 철조망이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고 RFA가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최근 북-일대화 관련 '일본 정객들이 마치도 우리(北) 때문에 조일관계가 풀리지 않는 듯 한 여론을 유포한다'며 "조일관계를 개선하자면 일본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부터 결산해야 한다"고 비난(9.25, 중통·노동신문/과거청산을 떠난 조일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
- 日 시마네현 의회 의원들의 '독도영유권주장'(독도문제 전담부서 조기 설치 등 對정부 요구 결의안 가결) 관련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영토팽창책동이 더욱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성토(9.25, 중통·민주조선/날강도적 본성의 발로)
- 中 위생부에서 北 보건성에 협조물자 기증식, 9.26 강하국(보건성 부상), 류홍재(駐北 中 대사)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9.26, 중통)
- 中 중앙TV방송국에서도 北 중앙방송위원회에 9.25 설비 기증(9.26,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미니 6자회담' 종료..북핵문제 입장차 확인(종합)(9/28, 연합뉴스)

- 각국의 6자회담 차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북핵 문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28일 종료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중국 다롄(大連)의 캠핀스키 호텔에서 속개된 이날 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 정부 대표단간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함.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유지하는 한 우리의 핵무기고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밝혀온 북한의 기존 논리를 되풀이함.
-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각각 북한의 약속 파기를 문제 삼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관련국이 대립각만 세울 게 아니라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짐.
- 공식 회의와는 별도로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참가국 대표단과 접촉했으나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북미 접촉에서도 북미 양국은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남북 6자회담 차석대표간에는 식사 장소에서 인사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접촉은 없었음.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박근혜 과거사 사과 발언 비난(9/27, 연합뉴스)

- 북한은 27일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5·16 쿠데타'와 '유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지난) 24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16 쿠데타와 유신, 인민혁명당 사건 등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놀음을 벌였다"고 밝힘.
- "문제는 기자회견에서 5·16과 유신이 북의 '남침 위협'을 막고 안보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변명하면서 우리(북한)를 걸고 든 것"이라며 "5·16과 유신 당시 '북의 위협'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북과 남에 평화통일 기운이 넘쳐났다"고 주장했음.
- 또한 대변인은 "새누리당 후보가 입장을 바꾼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권 후보들의 인기 상승으로 자칫 '대선'에서 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된 데 있다"며 "새누리당 후보의 집권은 유신 독재의 부활과 북남



사이 대결의 격화, 전쟁 위험의 증대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덧붙임.

나. 경제·사회·문화

● 北 대남기구, 북한인권영화제 비난(9/28,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8일 최근 국내 탈북자단체와 북한인권단체가 함께 연 '북한인권영화제'를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괴뢰 패당의 배후 조종 밑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얼마 전 서울에서 '제2차 북인권국제영화제'라는 것을 벌여놓고 '탈북자생활'이니 '수용소실태'니 하는 내용을 다뤘다는 반공화국 인권영화 9편을 상영해 우리(북한)를 헐뜯하게 중상모독했다"고 주장함.

■ 기타 (대남)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세계제패전략실현에 미쳐 날뛰는 미국과 동족대결책동만을 일삼는 괴뢰패당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라고 선동 및 "무자비한 자위적 조치로 대담할 것" 위협(9.25, 중통/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핵전초기지)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 관련 '5.16과 유신이 北의 남침위험을 막고 안보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 발언을 시비하며 '새누리당의 술수에 속지 말고 제2의 유신독재 부활을 허용하지 말며, 반대배격해 나설 것'을 선동(9.27, 중통·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최근 위성사진 "미사일발사대 건설 중단으로 보임" (9/25, 워싱턴 포스트)

- 북한은 국제적 사정범위의 로켓 발사대 건설을 멈춘 것으로 보임, 중단은 아마도 폭우 때문이며 이 때문에 2년간의 공사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최근 찍힌 위성사진에 의해 추측되었음.
- 이러한 건설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같은 단지 내의 다른 기존의 발사대를 향후 사용을 위해 다시 수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29 개의 이미지들은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의 웹사이트인 38 North에 의해 관련 언론에 제공되었음. 이러한 수리작업들은 발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북한이 향후 로켓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38 North에서 닉 헨슨이 주장함.
- 북한은 2006년 과 2009년에 핵실험을 하였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양이 아직 핵무기를 수축(경량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을 얻지는 못했다고 믿고 있으며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장거리 미사일의 끝에 장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건설 중단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분석 결과는 이번 여름에 내린 강한 폭우로 인해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대다수의 농경지가 침수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의 의견임. 북한은 특히나 자연재해에 약하며 그 이유는 오래된 배수시설과 벌목의 성행과 부족한 인프라 시설 때문인 것으로 보임. 새로운 발사대의 작업장에는 어떤 인부도 목격되지 않고 있음. 새로운 사진에서는 어떠한 홍수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장의 장비들은 다른 건설 현장으로 옮겨져서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음.
- "어떤 이유에서든 지, 건설의 지연은 북한으로 하여금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 것이며 공사계획도 적어도 1,2년 정도 지연되게 될 것이다."라고 리포터는 전함.

나. 미·북 관계

● 北, 美의 미안마 대북관계 단절 요구 비난(9/28,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미안마에게 북한과 관계 단절을 요구한 것에 대해 "미국이야말로 모든 나라가 상대하지 말아야 할 '나쁜 친구'"라고 비난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미국은 처음에는 미안마에 우리와의 군사관계를 중단할 것을 강요하다가 이제는



우리를 '나쁜 친구'로 몰아붙이며 관계단절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주장함.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과 18일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각각 뉴욕과 워싱턴DC에서 만나 미얀마와 북한의 군사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함. 앞서 지난 6월27일(현지시각) 데릭 미첼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미얀마가 북한과 불법적 관계를 완전히 끝냈다고 판단될 때까지 양국(미국-미얀마) 관계의 완벽한 정상화는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를 고립 압살해 보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자체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힘. 이어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더는 배겨낼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함.

다. 중·북 관계

● 中, 북한 광산개발 위해 5300억 원 지원, 속셈은? (9/25, 매일경제)

- 중국이 북한과 합작해 북한 투자 펀드로 30억 위안(약 5300억 원)을 조성해 광산개발·항만·고속철 등의 북한 종합개발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임. 또 북한 전 지역의 지하자원 탐사 독점권까지 중국이 획득한 것으로 알려짐.
- 2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신경보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중국해외투자연합회는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30억 위안 규모의 북한투자 전용펀드를 설립하기로 협정 체결함. 중국해외투자연합회는 중국 경제 관련 부처 산하 단체며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는 북한 유일의 외자유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당국 산하 기관임. 민간 자본으로 구성되는 이번 펀드는 1차로 10억 위안(약 1774억 원)을 들여 북한의 대규모 광산투자를 비롯한 부동산·항만 개발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임. 특히 중국은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길이 376km의 고속철 사업 투자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대북 투자에 중국의 500대 기업이 참여할 계획이며 우선 100대 기업이 펀드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임. 이번 펀드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의 투자가 대부분 북한의 지하자원에 쏠려있다는 점임. 중국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을 선점하게 되면 현금이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낮은 가격에 지하자원을 넘길 가능성이 큼. 이를 계기로 중국이 북한에 개혁·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 앞서 8월,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는 중국 관영 동북성 탐사그룹에 북한 전 지역의 지하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기로 합의했으며 중국 측은 자본과 인프라를 제공해 북한 정부에 '지하자원 지도'를 제공하



기로 함.

-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처럼 독점 탐사권을 획득한 것은 장차 북한 지하자원의 독점 개발권까지 노리기 위해서라고 분석함. 민간연구단체인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 중 18종류 광물의 잠재 가치는 2012년 현재 9조7574억600만 달러(약 1경1026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지하자원의 21배 이룸.

● <北-中 백두산 관광개발 '맞손'>(9/28,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관광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백두산(중국어명 창바이산·長白山)의 북한 쪽 지역 관광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로 해 주목됨. 북한 백두산 관광지 개발과 관광객 왕래는 남북한이 그동안 수차례 합의했다가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된 사업임.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11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연내 백두산 관광 2회 이상 실시'에 합의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함.
- 북중 간 이번 합작의향서 체결은 본격적인 백두산 개발사업 추진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됨. 개별사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정부 기구인 국가관광총국과 창바이산관리위원회가 공동 개발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에서는 최근 북한 곳곳의 명승지를 여행하는 관광코스가 많이 늘어나는 등 유례없는 북한 관광 붐이 일고 있음. 북중은 예전에도 3~5개의 관광코스를 꾸준히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코스가 10여개로 증가함. 북한 관광형태도 이전에는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이나 금강산 인근 원산공항에 내려 버스로 이동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으나 현재는 비행기 이외에 훈춘(琿春), 투먼(圖們)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출발하는 기차, 자가용, 도보관광 등이 추가로 생김.
-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북·중 관광이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중국과 단기간에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북한의 이해가 맞물린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음. 특히 백두산은 중국 측에서도 관광객 유치율을 늘리기 위해 인근에 공항을 세우고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공을 들이는 지역이어서 북한과 연계한 관광 개발 사업이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음. 중국 쪽 백두산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는 2008년 88만 명에서 지난해 142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1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일각에서는 백두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관광객 유치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또 남한에서는 백두산이 북중 국경으로 정해진 계기가 된 1909년 간도협약과 1962년 북중 국경조약이 무효라는 주장도 적지 않아 북중 간 백두산 공동 개발의 추진 범위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北日 국장급 대화 이달 개최 무산 전망(9/25,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합의한 국장급 대화의 조기 개최가 어려울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25일 일본과 북한이 지난달 말 과장급 협의에서 국장급 대화로 격을 높여 '가능한 가까운 시기에 베이징에서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 대화 일정이 결정되지 않아 월내 개최가 어렵다고 보도함.
- 일본은 북한과의 평화선언 10주년인 지난 17일 협의 재개를 희망했지만 북한이 거부함. 또 일본에서 북한과의 협의를 담당할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북일 대화의 이달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 감. 북한이 일본과의 국장급 대화를 미루는 것은 납치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일본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일본은 북한과 협의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납북자 문제를 들고 있지만 북한은 2002년 북일 평화선언 이후 5명의 납북자를 돌려보낸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임.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현재 북한과 차기(국장급) 협의 일정 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함.

마. 러·북 관계

● "러, 北에 밀가루 4천t 추가 지원"(9/24, 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에 밀가루 4천 톤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24일 전함.
- 이 방송은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북한에 밀가루 4천 톤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며 "비상사태부 관계자는 '대북 지원은 러시아 정부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이의 양해문에 따라 실현된다.'고 말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밀가루 4천100t을 북한에 제공했다"며 (러시아 극동 지역의) 나훗카항을 떠난 밀가루는 오는 27일 청진항에 도착한다고 설명함. 앞서 러시아는 북한에 지난 8월과 7월에도 각각 2천 톤의 밀가루를 지원해, 올해에만 총 8천 톤의 밀가루를 지원함.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WFP를 통해 밀가루 등 식량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함.

바. 기 타

● "北 최고인민회의서 중대 발표 예상"(9/24, 연합뉴스)

- 프랑스의 일간지 르 피가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깜짝 놀랄만한 경제개혁에 관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보도함.
- 르 피가로는 25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제1위 원장이 참석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전망함. 신문은 중국이 북한의 추가 개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인 북한



은 현재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석함. 르 피가로는 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중국통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중순 중국을 방문한 것은 김정은의 중국 공식 방문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김정은의 방중이 이뤄지면 중국의 차기 국가주석으로 내정된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함.

-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의 휘젠귀 원장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여러 움직임은 북한이 경제개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김정은 12년제 의무교육으로 정책변화 시도(9/25, 워싱턴 포스트)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화요일 기존 11년 의무교육기간을 1년 추가하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김정은 정권아래 처음 이루어지는 정책 변화라고 국영통신이 전함. 김정일 체제 아래서 일 년에 한번 꼴로 이루어지던 것이 관행이었던 최고인민회의는 수도인 평양에서 육개월 안에 두 차례 이루어짐.
- 지난 12월 그의 아버지의 사망이후에 정권을 물려받은 김정은 입회하여 회의는 진행되었음.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전의 11년제 의무교육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데 동의했다고 전함. 북한의 헌법은 북한 어린이들의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있지만 무상교육을 일 년 더 연장하는데 정부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부가 될 지는 언급이 없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北도발 방지' 외교노력 강화(9/24,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행위를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을 앞둔 한미 양국은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전함.
-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는 중국 등을 통한 간접적 노력과 함께 북미 뉴욕채널 등을 활용한 노력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됨.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유형을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국지적 대남도발 행위 등 3가지로 나누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이 당국자는 "외교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한미 양국이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함. 그는 최근 북한 어선의 잇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 "뭔가 북한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면서 "추



가 도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지켜보면서 우리의 대비 태세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힌.

-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박하게 뭔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안한다."고 분위기를 전함. 그는 또 소위 'CVID원칙(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반복 가능할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실효성에 대해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회의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 "CVID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미국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학자 개인의 의견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의미를 절하함.

나. 한·중 관계

● 韓-中 외교장관 "올바른 역사인식 중요"(9/25, 연합뉴스)

- 우리나라와 중국 외교장관이 동북아시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국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
- 제67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24(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양자회담을 열어 동북아 지역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관련국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담보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배석자들이 전함. 이는 일본이 유엔총회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토대로 양국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도발을 강행할 경우 두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 이날 회담에서 양 부장은 "관련 국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도전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김 장관은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함. 독도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배석자들의 설명임.
- 양국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특히 북한 어선의 잇따른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상황이 돌발적인 사태로 발전되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함.
-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한·중 영사협정 협상을 가속해 양국 간 경제·통상, 영사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도 계속 추진기로 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을 두고 양국 간 주요 현안들과 한반도 정세, 지역과 국제무대에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일본 측 수석대표로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26일 기조연설에 나서며 중국과 한국 수석대표인 장 부장과 김 장관의 연설은 27일과 28일로 잡혀 있음. 일본 언론은 노다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요구할 방



침이라고 보도했지만 그가 독도나 센카쿠 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불분명함. 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과거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수위는 노다 총리의 발언 내용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임.

● 정부, 中 '이어도 감시·감측'에 항의할 듯 (9/25, 연합뉴스)

- 정부는 중국이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시·감측키로 한 데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관할권 주장으로 판명되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당국자는 24일 "아직 우리 쪽에 중국 측의 입장이 공식 전달되지 않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중국의 감시·감측 의도가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이라면 항의하고 조치 중단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km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와 이어도 과학기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힘. 조 대변인은 "유엔 해양법 협약상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항해와 비행은 허용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이어도를 비롯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황옌다오(스카보러 섬) 등 분쟁도서에 대한 무인기 감시·감측 체제를 구축키로 하면서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으로 명시함. 중국은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 왔지만 올 들어 부쩍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의 수위를 높여 왔음.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지난 3월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 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을 샀.
- 당시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는 장신현(張愐<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 측의 진의를 따져 물으며 "이어도는 한중간의 EEZ 경계획정 전이라도 우리 측 관할 범주에 들어오는 수역으로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항의함.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287km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임.
- 양국은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EEZ 경계획정 협상과는 별개로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진행 중임. 조 대변인은 "한중간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EEZ 경계획정을 하면 이어도는 자연히 우리 측 수역에 들어온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함.
- 한중 양국은 EEZ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 협상은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



이지만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협상이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楊潔智)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유엔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함. 조 대변인은 "양국 간의 입장이 달라서 지금까지 많은 교섭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조기에 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다. 한·일 관계

● <정부, 노다 '위안부' 주장에 강력 반박>(9/24, 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끝난 문제라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주장을 "부당하다"고 일축하며 조목조목 반박함. 정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바탕으로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다"면서 책임 인정에 바탕을 둔 배상 없이는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함.
- 노다 총리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보상문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됐다"고 언급,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함. 우리 정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인데다가 청구권 협정 체결 과정에서 토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함.
-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소위원회 보고서 등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에 법적인 책임이 있고 법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음. 이 당국자는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소수의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 데 대해서도 "일본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받지 않았다"고 평가 절하함.
- 노다 총리는 WSJ와 인터뷰에서 기존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한국 측의 비난은 양심적인 일본 국민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라면서 유감의 뜻을 밝힘.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기에 한국 피해자들과 한국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서 일본이 기존에 한 사과의 진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함. 이 당국자는 노다 총리가 "한국과 물밑협의를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도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함. 그는 지난 7월 이후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함.
- 정부는 지난해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같은 해 9월15일과 11월15일 두 차례 일본에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2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기와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



음. 정부는 현재로서는 일본에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중재위에 회부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중재위 회부 시점과 관련, "변화의 계기를 기대한다면 일본 새 총리가 선출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투명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남겨두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한국, PSI 참가 日자위함 부산항 기항 거부"(9/25, 연합뉴스)

- 오는 27일 실시 예정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합동 해상훈련을 주도하는 한국이 일본 자위함의 부산항 기항을 거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함.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이 독도 문제 등을 고려해 이미 예정됐던 일본 자위함의 부산항 기항을 거부했다고 전함. 신문에 의하면 일본 측은 "(한국이 일본 자위함의 기항을 거부한 것은) 다국 간 훈련의 주최국으로서 매우 예의에 어긋난 것이다"고 반발함.
- 한국 측은 그러나 '제반 사정'을 이유로 자위함의 부산항 입항을 거부함. 이에 따라 한때 일본의 훈련 불참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미국이 자위함의 부산 기항이 필요 없도록 훈련 시나리오를 수정함.
- 한국 주도로 미국과 일본, 호주가 참가하는 이번 PSI 훈련은 부산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됨. 이 훈련에 일본에서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가 부산을 경유하지 않고 자국 기지에서 직접 참가함.
- 일본 측은 독도 문제 외에 자국 자위함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육일승 천기를 함선의 깃발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한국이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음.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18일 이번 훈련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 미국, 호주의 참가 전력은 부산항에서 출항하고 일본은 일본 쪽 항구에서 출발해 공해상에서 합류한다."고 밝혔으나 일본 자위함의 입항 거부 여부는 언급하지 않음.

● <서방언론 잇단 日비판...부정 여론 확산>(9/30, 연합뉴스)

-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서방 언론 매체들의 기사와 논평이 잇따르고 있음. 일본이 국제사회를 향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홍보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음.
- 제2차 대전의 상흔을 극복하고 지역의 대통합으로 이끈 유럽 지역의 언론이 이를 주도하고 있음. 2차 대전으로 피해를 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범국인 독일의 언론도 잇따라 일본을 비판하고 나섬.
- 독일의 국영라디오 방송인 도이칠란트라디오는 지난 22일 논평에서 "일본의 역사에 대한 반성 부족이 한국 및 중국과 겪고 있는 영토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함. 이 방송은 "일본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의 침략자로서 자국의 전쟁사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꼬집었음. 독일의 대표적 중도 좌파 신문인 쥐트도이체 차이팅(SZ)도 지난 19일 기사에서 "일본이 이웃 국가와 대립을 반복하는



- 이유는 과거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2차 대전의 최대 피해국인 프랑스의 언론도 일본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정통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는 27일 인터넷판 분석 기사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며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독도 문제를 취급하는 일본의 태도를 질타함. 렉스프레스는 "홀로코스트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 독일과 달리 일본은 일제강점기 한국인에 저지른 과거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진 적이 없다"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을 비판함.
 - 네덜란드 주요 경제일간지인 HFD(Het Financieele Dagblad)도 22일자 기사에서 일본의 태도를 비판함. 이 신문은 "운동경기 중 독일인이 나치 깃발을 흔들거나 독일 장관이 공개적으로 네덜란드 영토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서 이기철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의 언급을 인용,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간 발생한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고 지적함. 신문은 "독도는 1905년 일본 제국주의 팽창 정책의 최초 희생물이었다."면서 과거사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일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함.
 -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인 엘 문도도 25일자 인터넷 판에서 독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과 관련, 일본의 정당화될 수 없는 팽창주의 욕구에서 비롯된 갈등이라고 비판함.
 - 이에 앞서 영국의 유력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12일 장 피에르 레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명예교수의 기고문을 실어 "일본은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의 만행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처럼 일본을 비판하는 유럽 언론들은 일본을 독일과 비교하면서 독도 문제가 과거사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외교가에서는 유럽 각국의 주요 매체들이 이처럼 일본 비판에 나서면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함. 이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확산 상황에서 대일(對日) 비판여론이 영토 문제까지 확산한다면 일본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보임.

라. 미·중 관계

● 美 괌에 핵항모 증파...센카쿠 개입 조짐(9/25, 연합뉴스)

- 미국이 동북아와 가까운 서태평양 지역에 항공모함을 증파하는 등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미국 해군은 최근 괌에 니미츠급 핵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CVN 74)호를 파견했다고 중국시보 등 중화권 언론들이 24일 보도함. 괌에는 현재 핵 항모인 조지 워싱턴(CVN 73)호가 군사훈련을 위해 정박 중임. 미국



측은 조만간 2척의 항공모함을 동시에 동원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미국 당국은 "이번 조치는 아시아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런 움직임은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 센카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 직후 나온 것임.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2척의 항모를 특정 지역에서 동시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함.
- 중화권 언론은 미국의 항모 증파가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충돌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음. 일각에선 센카쿠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미·중 간 신경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선언한 미국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적극적으로 지역 문제에 대한 개입에 나섰다는 것임.

마. 미·일 관계

● "美, 日 '2030년대 원전 제로' 결정 막아"(9/26, 연합뉴스)

- 미국이 일본의 '2030년대 원전 가동 제로(0)'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 내각회의(각의) 공식 결정을 막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함.
- 마이클 프로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내각부 정무관에게 일본이 '2030년대까지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한다'는 각의 결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연구기관인 신국가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태안보프로그램 선임고문도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 보좌관에게 "구체적인 일정도 없이 (2030년대라는) 목표 시점을 밝히는 것은 위험하다"며 "각의 결정을 해서 정책을 속박하면 (나중에) 고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힘. 오구시 정무관이나 나가시마 총리 보좌관은 모두 일본 측이 원전 제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에 보낸 특사들임.
- 일본은 결국 14일 각의에서 '2030년대 원전 제로' 정책을 정식으로 결정하지 못함. 일본에선 이를 미국의 반대 탓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함. 미국이 이처럼 일본 내정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중단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수출 가속화'와 '핵기술 확산'이라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짐.
-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속내를 내비친 적이 있음. 또 미국은 각국의 핵물질 방호체제 확립이나 국내 원전 건설 등에서 일본의 기술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원자력에서 철수할 경우 미국의 핵 비확산이나 핵 안보 전략, 원전 사업까지 대폭 수정해야할 형편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함.

● 美 클린턴 국무, 日에 센카쿠 '신중' 요구(9/29, 연합뉴스)



-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일본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 신중한 행동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함. 이 통신에 의하면 클린턴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갈등과 관련 "주의 깊게,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여 달라고 요청함.
-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문제로 심각하게 대치한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 국무장관이 강한 톤으로 일본에 신중한 행동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임. 이는 미국이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갈등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악화하는 데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클린턴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독도·센카쿠 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에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호소함.

바. 미·러 관계

● 푸틴 "서방이 중동사태 혼란 부추겨" 비판(9/27,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시리아 사태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거듭 비판함.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부 라잔주(州)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우리의 파트너들(서방국가들)은 멈출 줄을 모른다"며 "이미 많은 지역에서 혼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시리아와 같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함.
- 푸틴은 이어 중동과 시리아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묻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모든 나라의 상황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지하지만 그러한 변화를 강제하는 것 특히 무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안으로부터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함.
-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중동 사태에서)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고 무력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렇잖으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며 "현재 우리는 혼란과 유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함.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의 조언을 무시하고 '아랍의 봄' 사태에 무력적 방법으로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주장임.

● "러시아, 화학무기 논의 美-시리아 접촉 주선"(9/27, 연합뉴스)

- 러시아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안전 관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시리아 간 접촉을 주선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밝힘.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제67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가 이 문제(화학무기 안전 관리 문제) 논의를 위한 미국 전문가들과 시리아 정부 간 접촉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큰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함.



- 라브로프는 이어 "러시아도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같은 우려를 시리아 정부에 전달했다"며 시리아 측으로부터 화학무기가 비축된 시설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함. 그는 그러면서 현재 시리아의 화학무기들은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라브로프는 가장 위험한 것은 시리아 화학무기가 알 카에다나 다른 테러단체 그리고 알 카에다와 관계를 맺고 있는 시리아 반군 조직 '자유시리아군'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경고함.

사. 중·일 관계

● 中, 日 하토야마 전 총리 초청(9/24, 연합뉴스)

- 중국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해 24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다른 14명의 일본인 귀빈들을 초청했다고 양국 소식통들이 전함.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양국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하토야마 전 총리가 초청에 응하면 중국 지도자들과 어떤 대화를 할지 주목됨. 하토야마 전 총리 외에 1972년 국교 정상화 당시 수상 다니카 가쿠에이의 딸인 다니카 마키코 전 외무상과 7개 일중 친선단체 대표 등이 초청자에 포함됨.
- 한편, 중국은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열 계획이던 국교정상화 기념식을 취소한다고 지난 23일 일본에 통보함.

● 中·대만 감시선 센카쿠 동시 진입(9/25, 연합뉴스)

- 중국과 대만의 감시선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 동시에 진입함. 25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대만의 순시선 6척과 어선 수십 척이 이날 오전 7시40분부터 8시까지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영해를 향해함. 또 중국의 해양감시선 4척과 어업감시선 1척 등 5척도 일본이 설정한 센카쿠 접속수역에 진입함.
- 현재 센카쿠의 일본 측 영해 바깥 접속수역에는 대만의 어선 40~50척이 항의 활동을 위해 진입했으며, 대만 해안수방서(해경) 소속 경비선 10척도 진입해 향해 중임. 대만 경비선과 어선이 선단을 이뤄 센카쿠 해역에서 항의 활동에 나선 것은 처음임. 일본 순시선의 경고에 대해 대만 경비선은 "이곳은 중화민국 해역이다. 우리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밖으로 나가달라"고 중국어로 응답함.
- 일본 정부는 총리실에 설치한 센카쿠 관련 정보 연락실을 관저대책실로 바꿔 대만과 중국 감시선·어선의 동향을 체크하며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음. 센카쿠를 관할하는 대만의 이란(宜蘭)현 어민들은 24일 오후 어선 70여척을 동원해 대만 동해안 쑤아오(蘇澳)항을 출발해 센카쿠 해역으로 향했으며, 북부 지룽(基隆)항 등 다른 지역 어선도 해상에서 합류해 센카쿠로 떠난 선단 규모가 100여척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짐.
- 한편 중국 농업부는 24일 밤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현재 댜오



위다오 근해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200척에 달한다고 밝힘. 다만 어선들과 달리 중국 어선들은 아직 일본 측의 센카쿠 영해나 접속수역에 진입하지는 않았음. 센카쿠 해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저장성, 푸젠성 일대에서 1천여 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센카쿠 해역의 중국 어선단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음. 농업부는 자국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센카쿠 주변 해역에 10척의 어정선(漁政船·어업관리선)을 파견해 상시적인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함.

- **외교부, 일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관련 입장 밝혀(9/25, 인민일보)**

 - 2012년 9월 24일,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연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정부의 영유권 수호에 대한 결심과 의지는 절대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 해관(海關) 측은 대일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역수준을 높였는데 이것이 경제적 제재의 일환은 아닌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경제적 제재가 중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홍대변인은 "관련 상황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일 경제협력은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고 일본의 불법적 '도서 구매' 행위가 중일 경제관계의 정상적 발전에 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 측이 원하던 바가 아니다. 일본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함. 그는 더불어 "일본 측은 반드시 중국 영유권을 침범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자리로 돌아와 중일관계 및 다양한 분야 협력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임.
- **中, 日美합동군사훈련 실시... "일본, 평화의 길 걷길"(9/25, 인민일보)**

 -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연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육상 자위대와 미국의 해병대가 최근 괌에서 섬 탈환 가상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은 일본 측이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힘.
 - 홍 대변인은 중국 측은 관련 보도를 알고 있었으며, 관련 측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하여 정치적 안보에 대한 상호신뢰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일하길 바라며, 일본 측이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함.
- **일본, 중국이 유엔에 제시한 다오위다오 지도에 대해 반발(9/25, 신화통신)**

 - 일본정부는 이달 초에 중국이 유엔에 제시한 다오위다오섬에 대한 해양 지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화요일 지역 언론이 전함.
 - 일본의 "센카쿠 섬"(다오위다오섬과 부속섬)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담고 있는 문서는 유엔에 전해졌다고 외무성 관계자에 의해 밝혀졌다고



NHK가 전함.

- 9월 13일 유엔을 방문한 중국 대변인 리바오등은 유엔사무총장인 반기문을 만나 중국정부에 의해 발표된 해양지형도 복사본을 건넸음. 더불어 국제기구와 다오위다오에 대한 기본적인 17가지 사항을 정리하였음.
- 일본의 수상 요시히코 노다는 수요일 유엔정기회의에서 영토분쟁이슈에 대해 소위 그가 말하는 "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언급하며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임. 일본은 또한 한국과도 작은 섬을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음.

● **日 하시모토 "센카쿠도 국제사법재판소서 해결"(9/28, 연합뉴스)**

- 일본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중국과의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영유권 갈등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함.
- 28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중앙정당 일본유신회 대표인 하시모토 시장은 27일 센카쿠 문제와 관련, "일본은 '영토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일단 봉인하고 ICJ에서 정정당당하게 주장해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그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했기 때문에 센카쿠에 대해서도 '영토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할 수 없다고 지적함. 그는 독도 문제와 관련, 한국과 공동 관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권과 영토 문제뿐 아니라 어업, 해저자원 등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함.
-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말해 정당 대표로서 참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 하시모토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달 10일 독도 방문 이후 역사와 영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 좌충우돌 발언을 쏟아내고 있음. 그는 지난달 21일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며 "있다면 한국이 내놔야 좋겠다."고 망언을 내뱉기도 함.

● **"中-日 정상, 1972년 센카쿠 논의 유보 합의"(9/30, 연합뉴스)**

- 일본의 1972년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정상이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문제에 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는 당시 공식 통역관의 증언이 또 나옴.
- 이에 앞서 일본의 중국문제 전문가 다바타 미쓰나가(田畑光永)도 지난 21일 양국이 센카쿠 문제를 보류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일본 측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밝힌 바 있음.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와 다니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저우 총리의 통역을 맡았던 저우빈(77)은 29일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저우 총리가 다오위다오 문제 논의를 유보하자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힘. 그는 "다니카 총리가 센카쿠 문제를 거론하자 저우 총리는 다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장래에 양국 정부간 평화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다니카



총리도 동의했다"고 설명함. 그러나 일본 정부가 1972년 9월27일 작성한 정상회담 공식 기록에 따르면 저우 총리는 "이번에는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지금 얘기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만 말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유보'라는 표현은 없음.

- 일본 정계 등은 이를 근거로 저우 총리가 센카쿠 주권 포기를 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앞서 일본 TBS 방송 베이징지국과 홍콩지국장을 역임한 일본의 중국문제 전문가 다바타도 최근 양국이 센카쿠 문제 논의 보류에 합의한 부분을 일본이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제기됨. 당시 정상회담을 수행 취재한 다바타는 양국 정상이 센카쿠 문제 보류에 합의했으며 "우익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일본 외무성이 우려해 민감한 내용을 삭제한 것 같다"고 말함. 이번 통역사의 증언으로 센카쿠 문제 논의를 유보하지는 양국 정상 합의가 있었고 일본 정부 기록이 조작됐다는 주장에 한층 무게가 실리면서 중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아. 일·러 관계

● 러, 쿠릴 개발예산 증액...실효지배 강화(9/25, 연합뉴스)

-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쿠릴열도 개발 예산을 증액하기로 함. 25일 NHK 방송에 의하면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24일 내각회의에서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발전계획과 관련, "개발 예산을 증액하는 정부령에 서명했다"고 밝힘. 이는 2015년까지 약 180억 루블(약 6천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쿠릴열도 개발 예산을 늘려 실효지배를 강화하겠다는 뜻임.
- 어느 부문에 예산 투입을 늘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투롭 섬 등의 도로건설 예산 등이 증액될 것으로 알려짐.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이었던 2010년 11월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쿠릴열도를 방문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도 방문함. 메드베데프 총리는 "(쿠릴열도 개발에 대한) 모든 결정사항이 신속하게 실현되기 바란다"면서 "(본토에서) 멀리 떨어졌다 고해서 쿠릴열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자신이 쿠릴 개발을 주도할 것임을 강조함.

자. 기 타

● <한·중·일, EEZ 경계획정 놓고도 '갈등'>(9/25, 연합뉴스)

- 동북아시아의 주요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음.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두고 한일, 중일 간 빚어진 영토 갈등 역시 연안국이 어로와 지하자원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 EEZ 경계획정과도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임.
- 우리 정부는 1996년 일본과 EEZ 협상을 시작하면서 독도와 일본의 섬 사이에 EEZ를 설정했다. 반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EEZ를 그



있음. 한일 양국 모두 독도를 자국의 EEZ에 포함시킨 것임. 한일 EEZ 협상은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가 독도를 놓고 영유권 갈등이 빚어지면서 언제 재개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임. 정부 당국자는 "협상을 재개하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협상 계획도 잡힌 것이 없다"고 말함.

- 한국과 중국 역시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시작함. 한중간에는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를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음.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km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임. 이어도는 도서가 아니라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은 없지만 양국이 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음. 우리 정부는 이어도는 한중 양국 간의 중간선에서 명확히 우리나라 수역에 속해있고 지리적으로도 마라도와 훨씬 가깝기 때문에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중국은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왔지만, 무인기로 감시·감측하기로 하는 등 올해 들어 부쩍 관할권 주장의 수위를 높여왔음. 해양법 전문가들은 관할권 분쟁이 있을 경우 중간선을 중요시하는 국제관례를 고려할 때 한국이 이어도 수역의 관할권을 가지게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음.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EEZ는 당사국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정부 당국자는 "EEZ해양경계 획정 협상은 실무선에서는 협의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함.
- 중국과 일본이 참여하게 대립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역시 양국의 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중국해에 있는 섬임. 동중국해 경계 획정과 관련, 일본은 양국의 연안에서 등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채택하지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중간선보다 일본 쪽에 위치한 오키나와 해역까지 자국의 대륙붕을 확장하려 하고 있음. 중국과 일본은 1997년 어업 협정과 2008년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에 합의할 당시 경계획정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 EEZ 경계획정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
- 한·중·일 3국은 대륙붕을 놓고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음. 동중국해의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3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음. 우리 입장은 '바다 위는 몰라도 바다 밑에는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이어진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있다'는 것임.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음. 중국 연안에서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결돼 있으니 일본의 권리는 없다는 것임. 중국은 최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동중국해 일부 해역'의 대륙붕 경계 안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우리 정부 역시 조만간 공식문서를 CLCS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은 동중국해에서는 대륙붕 한계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간선(한·중·일 해안에서 같은 거리)을 대륙붕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

